

공공부문 1월 56.8조원 집행(전년대비+8.5조원) 연초부터 집행 속도 높이고, 민관합동으로 예산낭비 현장점검 강화

-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,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
- 신속집행 및 중점관리사업, 연초부터 차질없이 집행중
- 집행과정에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시민사회 추천 전문가를 포함하여 예산 낭비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하고, 점검대상 직접 선별 및 현장조사 실시

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2.12일(목) 15: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「재정집행 점검회의」를 개최하여 2026년 신속집행 추진 현황, 중점관리사업 집행실적 등을 점검·논의하였다.

* 참석: 과기부, 교육부, 농식품부, 국토부, 중기부, 경찰청 등

1월까지 공공부문(재정·공공기관·민간투자) 신속집행은 총 56.8조원*(잠정)으로 전년대비 8.5조원 증가하여 연초부터 원활한 집행 흐름을 보이고 있다. 또한, AI·신산업 혁신, 소상공인·저소득층 등을 위한 중점관리사업은 관리대상 34.5조원 중 2.3조원을 집행하였다. 강 실장은 “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연초 집행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”고 당부하였다.

* (‘25.1월말) 48.3조원(집행률 7.8%) → (‘26.1월말) 56.8조원(집행률 8.7%)

한편,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. 정부는 그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국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포상금을 지급해 왔으나, ’22년 이후 신고건수*가 지속 감소하고, 제도개선 등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.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낭비

신고를 활성화하고,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시범운영하기로 하였다.

* 신고건수(건): ('21) 3,065 ('22) 2,280 ('23) 1,977 ('24) 1,520 ('25) 1,381

기존에는 각 부처에서 신고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별하고 포상금 자문단의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. 앞으로는 포상금 자문단을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으로 확대·개편하여, 점검단이 직접 점검 대상을 선별하고,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도 개선안과 포상금 지급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.

정부는 2월중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하고, 3월부터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착수할 예정이다. 6월에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, 포상금 지급제안 등을 재정집행 점검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할 계획이다.

강 실장은 “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, 국민의 눈높이에서 감사·견제·협력하는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의 구성 및 시범운영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”고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재정투자심의관 재정집행과	책임자	과 장	정석철 (044-214-3270)
		담당자	사무관	남기인 (nki1213@korea.kr)
			사무관	안수민 (an2230@korea.kr)
			주무관	김유빈 (7ybkim@korea.kr)

